

# 한국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김 철 홍\*\*

## I. 들어가는 말

한국에서 인권교육 그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인권단체의 인권교육노력과 함께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는 것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령에서 인권교육에 관해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sup>1)</sup>에 규정되었다. 제26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입법·사법·행정 포함),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종합전담기관’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으로서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유엔의 ‘파리원칙<sup>2)</sup>’과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인권교육에 관한 논의와 한국 인권교육 실천가들의 개념적 논의를 종합 분석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을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

---

\* 투고일자 : 2013. 11. 27    심사일자 : 2013. 12. 11    게재확정일자 : 2013. 12. 18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

- 1) 제26조는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위원회법 제26조 제2항),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위원회법 제26조 제3항). 그리고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위원회법 제26조 제4항). 이외에도 위원회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위원회법 제26조 제6항).
- 2) 파리원칙 제3항에서는 국가인권기구는 “인권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의 작성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와 대학 및 전문영역에서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참여해야 하며, 특히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언론기관을 이용해서 대중의 의식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권문제 및 모든 형태의 차별 특히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노력들을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인권교육은 학습자 자신의 인권을 증진하고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변화 지향적 운동이며, 인권교육 역시 인권에 관한 학습이 일어나는 곳에서 인권 존중적 환경과 방식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또 다른 과정이라고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사회에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교육 영역을 학교영역 인권교육, 공공영역 인권교육,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공공영역 인권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 인권교육을 말한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및 제6호의 국가기관(입법·사법·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 및 제3호의 구급·보호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을 말한다고 하겠다.

본 글에서 '공무원 인권교육'은 공공영역의 인권교육 중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행정부 소속 공무원(학교의 교원 제외) 대상 인권교육으로 제한하여 사용한다. 즉, 한국 공무원의 인권교육은 국가(경찰, 검찰 등 법무공무원, 중앙부처 행정공무원)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말한다고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인권교육 제도화'<sup>3)</sup>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영역에서는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았고, 인권교육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었기 때문이었다.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을 위해 '시범 인권감수성과정'을 운영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어 각 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인권과목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방안은 각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인권교육 도입을 요청하면서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교재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인권강사인력도 양성하여 지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권교육을 제도화시켰다. 마지막으로

3) '인권교육 제도화'란 우리 사회 특정영역(예: 학교, 경찰, 군대 등)에서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칙 등에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 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과정이나 각 과정에 인권과목을 개설하는 으로 정의하였다.

인권교육 실시현황 등 인권교육 운영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제도화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교육을 종합 전담하여 한국 사회의 각 영역에 인권교육을 확산하고 인권의식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촉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년 동안 추진한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을 분석한 후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 II. 한국 공무원 인권교육의 실시 현황

### 1. 공무원 인권교육의 제도화 현황

인권교육 제도화 수준은 ① 교육훈련기관의 각 과정에 정규 인권과목개설, ② 교육훈련기관에 정규 인권과정개설, ③ 인권교육 관련지침 제·개정, 인권교육 관련법령 제·개정<sup>4)</sup>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인권교육 제도화의 단계는 과목개설, 과정개설, 교육지침 제·개정, 인권교육 의무화 하는 개별법령 제·개정 순으로 발전하였다.

공무원 인권교육의 제도화 동향 중 가장 뚜렷한 현상은 정신보건법과 노숙인복지법 등 개별법에 인권교육 조항을 삽입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 인권조례 등을 제정하면서 인권교육 의무조항을 포함하거나,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흐름이다.

첫째, 경찰, 군대 등에서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흐름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인권침해 차별행위 예방차원에서 위원회 진정 사건이 가장 많은 교정·경찰 등 법 집행공무원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군대, 경찰, 검찰 등과 관련하여 군 인권교육 훈련 등 7개 행정규칙<sup>4)</sup>을 통해 인권교육이 의무화 되었다. 군대, 인신구속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 경찰 등 국가권력 집행을 통한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사자에 대

4) 국방부 ‘군인권교육훈령’ 이외에도 ‘부대관리훈령’, ‘군수사절차상인권보호에관한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등이 있다.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인권침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행정규칙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신보건법, 노숙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등 사회적 약자관련 개별 법령의 인권교육 의무화 흐름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수용하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었다. 일명 도가니 사건 등과 관련하여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청소년·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과 아동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조례 제정을 하면서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흐름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인권교육의 지역화’로서 매우 고무적 현상이라고 하겠다. 제정된 인권조례에 인권교육이 포함된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8개, 기초자치단체 24개 등 32개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단체장이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sup>5)</sup> 하고 있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중점대상은 소속공무원 및 직원뿐만 아니라, 단체장이라도 감독(출자, 출연하는)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종사자, 출연과 재정보조 받은 복지시설(법인, 단체 포함) 종사자, 공공기관 구성원(지방공기업법의 공사 공단 등 포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 인권교육 발전은 공무원교육훈련지침내 시책과목으로 인권교육 반영(2006) -> 지자체 공무원 연수원 ‘인권과목’ 개설(2008-2012) -> 인권과정 개설(제주, 충북, 광주, 부산, 전남 2008-2012) -> 인권조례 제정(광주, 전북 등)에 따른 인권교육 의무화(2010-2012)단계를 거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시책과목으로 인권교육실시가 포함되면서 중앙 행정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인권특강이 개설되는 경향이 있다. 행정공무원 인권교육은 2006년 시작되어 2007년도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

5) 24개 지자체에서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2회 이상은 광주, 서울성북구 뿐이다.

육과정(2주 이상)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면서 제도적 도입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서 삭제되었다가 2011년부터 다시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시책과목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의거 각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인권특강 수준으로 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국방부도 2006년도부터 인권교육훈령제정 이전까지는 육·해·공군 장병 교육훈련기관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대신에 ‘장병기본권’이라는 과목을 국방부 통제과목<sup>6)</sup>으로 개설하였다.

## 2. 공무원 인권교육실시 현황

### 1) 군대 인권교육실시 현황

군대에서의 인권교육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도에 군대인권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인권교육 기본계획(3년)<sup>7)</sup>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내 인권교육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연수과정 등을 운영하였다. 국가인권위는 2005년 군 수사담당자 인권특강 15회(5,480명) 및 육·해·공군 장성(무궁화회의) 대상 위원장 특강을 실시하였고, 군내 자체 인권교육을 담당할 핵심인력 육성차원에서 한국 최초로 육·해·공군 인권전문상담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군 인권담당자 연수과정」(12.13~16; 3박4일, 35명) 프로그램개발·운영하였다.

2006년, 2007년에는 처음으로 군 지휘관 및 교육기관 인권교육 담당 교관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하였다. 군대내 인권가치 도입 필요성 등 군 지휘관의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일선 대대장급 지휘관을 대상으로 ‘군 지휘관 인권리더십 과정’(1일 과정)을 권역별로 순회하여 각 4회 총8회(2006년 4회 150명, 2007년 4회 170명)운영<sup>8)</sup>하였다. 이와 함께 군대내 각 교육기관 인권교육 담당 교관 및 업무담당자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교육 지도역량 제고를 위해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3박4일, 2006년 35명,

6) 통제과목이란 국방부가 각 군에 대하여 교육시행을 지정한 교육과목을 말한다..

7) 국가인권위는 군대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3년계획 수립(2005년~2007년) 추진함. 이 계획은 군대 인권침해 예방을 통한 인권 친화적 군대환경 조성을 목표로 ① 국방부 및 육해공군등과 협력 체계 구축, ② 군대내 인권과목 제도화, ③ 인권강사 양성 등 인적역량 강화, ④ 교육자료 개발 등 물적 기반 구축, ⑤ 군 인권증진 정책 제도 개선을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였다.

8) 프로그램은 군관련 인권쟁점사례, 내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군인의 인권보장 찾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7년 40명)을 운영하였다.

2008년 <군 인권교육 규정>이 제정 시행되면서 군대 인권교육은 제도화가 되었다. 군대 인권교육의 추진 주체가 군 인권교육 훈령 제정이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훈령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공동 주최에서 국방부 및 육·해·공군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군대내에서도 국방부 중심에서 육·해·공군 등 각 군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이후 군대(국방부 및 육·해·공군 포함) 인권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표 1>과 같이 2008년 52회 2,812명, 2009년 63회 12,718명, 2010년 355회, 42,474명, 2011년 2,928회 1,808,283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연도별 1회 평균 교육인원을 보면 2008년 54명, 2009년 201.9명, 2010년 119.6명, 2011년 617.67명으로 부대별 대규모 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권특강은 장병기본권보장이나 군대와 인권을 주제로 2008년 33회에서 2011년 2,906회로 대폭 증가하였다. 1회당 교육인원도 2008년 62명에서 2011년 621명으로 초대형 강의로 변화되었다. 이는 군대내 인권문제가 발생하여 부대교육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겠다. 2011년에 실시된 대부분 인권특강은 1~2시간 강의로서 1시간 2,095회로서 72.1%를 차지하고 있고, 2시간 강의가 777회 26.7%로서 1~2시간 인권특강이 98.8%를 차지하고 있다. 인권강의 또는 특강은 98.2%가 자체 강사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강사의 활용도는 1.8%로서 매우 낮았다.

<표 1> 군대 인권교육 실시 현황('08~'11년)

구 분	과정수				교육 횟수				교육 인원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인권 교육과정	9	9	10	13	19	15	11	22	767	594	666	2,750
인권특강	-	-	-	-	33	48	344	2,906	2,045	12,124	41,808	1,805,533
계	9	9	10	13	52	63	355	2,928	2,812	12,718	42,474	1,808,283

※ 인권교육과정 : 6시간이상 교육 과정 / 인권강의 또는 특강 : 6시간미만 강의

인권교육과정은 2008년 9개 과정 19회, 2009년 9개 과정 15회, 2010년 10개 과정 11회, 2011년 13개 과정 22회 등 1박 2일과정이 대부분이다. 처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개설했지만 이후 국방부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교육과정이 확대되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① 국방부: 군 의료종사자과정, 군 인권교관 연수과정, 군 교정업무 종사자과정, 수사종사자과정, 법무관과정 ② 육군본부: 사단급 인권실무자반과정, 대대장급 지휘관반, 순회 장병인권교육 ③ 해군본부: 인권담당 관계관과정, 군법무관과정 ④ 공군본부: 인권관계관과정 등 13개 과정이 개설되었다.

## 2) 행정공무원 인권교육실시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지자체 행정공무원 인권교육 추진을 위해 2003년도 ‘행정과 인권’ 교재를 개발하였고, 2006년도 이를 사이버 인권교육콘텐츠로 개발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과정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작하였다. 우선 집합 인권교육(off-line)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부터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을 조사하였다. 당시 조사에 의하면 인권관련 과목 강의개설 기관은 6개 기관(중앙공무원교육원, 선거연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외교안보연구원,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국립환경연구원)으로서 강의 횟수 및 인원은 19개 과정, 19,793명이었다. 양성평등에 대한 교과목이 기본적으로 많이 편재되어 있고,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일반에 관한 교과목이 부재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2008년과 2009년도 교육훈련기관 기획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여 인권교육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런 결과 16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인권과정 및 인권과목이 개설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 현황조사를 보면 2009년에 51회 158시간 2,956명, 2010년 120회 279시간 10,295명, 2011년 152회 394시간 11,559명으로 총 322회 831시간 24,812명에 대한 인권교육이 매년 확대 실시되었다.

〈표 2〉 행정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 실시 현황<sup>9)</sup>(’09~’11년)

구 분	전체			2009년			2010년			2011년		
	횟수	시간	인원	횟수	시간	인원	횟수	시간	인원	횟수	시간	인원
합 계	323	832	24,812	51	158	2,956	120	279	10,295	152	394	11,559
인권 교육과정	14	193	1,055	1	54	91	3	37	77	10	101	887
인권특강	309	639	23,757	50	104	2,867	117	242	10,218	142	293	10,672

1회당 교육인원은 76.8명(교육과정 75.3명, 인권특강 76.8명), 교육시간은 2.6시간(교육과정 13.8시간, 인권특강 2.1시간)으로서 군대와 다르게 중규모의 교육인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되었다고 하겠다. 이는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각 과정에서 인권과목이 개설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인권특강의 주제는 2009년도 여성분야(31시간)가 인권일반(29시간)보다 많았지만 2010년부터 인권일반(65시간, 1,302명)이 여성분야(61시간, 1,571명)도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2011년에도 인권일반(93시간)의 비중이 여성(36시간, 711명)보다 더욱 커졌다. 이외에도 아동, 노인, 다문화 등 다양해졌다. 행정공무원분야 인권강사는 대부분 외부 강사를 활용하였다.

행정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과정은 2009년도 지방공무원교육을 담당하는 충북(2일과정, 1회)과 제주도인력개발원(3일과정, 2회)이 최초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과정을 운영하였다. 2010년 제주도, 대구광역시의 2개 과정 3회, 2011년에는 제주, 대구, 광주, 전남, 충북, 충남 등 6개 기관에서 6개 과정을 개설하여 10회 운영하였다. 2011년 개설된 6개 과정의 현황을 보면 <표 3>과 같다. 2일 과정이 3개 과정, 3일 과정이 5개 과정으로 교육시간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인권과목도 인권일반, 다문화, 장애인, 노인, 소수문제, 북한인권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9) 현황조사에 응답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30개 기관으로서, 미응답 기관(10개 기관)은 인권교육 실적 및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3> 2011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인권교육과정 개설 현황

교육기관	과 정 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인원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사회적 취약계층 이해향상과정	6급 이하	3일	22
	인권감수성향상과정	6급 이하	3일	20
	다문화사회 이해과정	전 직원	3일	85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전 직원	2일	180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과정	6급 이하	2일	147
제주도 인재개발원	인권 및 국민권익신장 과정	5급 이하	2일	245
충남공무원교육원	다문화사회이해과정	6급 이하	3일	28
충북자치연수원	다문화사회와 이해	6급 이하	3일	160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시간상·공간상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인권교육의 접근성 제고 및 인권교육 확산을 위해 2005년 사이버 인권교육센터를 개통하고 2006년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지침(2012년에 예규화)을 수립해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정은 7개 과정으로서 ① 인권의 이해, ② 인권의 이해 심화, ③ 장애차별예방과정, ④ 성차별예방과정, ⑤ 행정과 인권, ⑥ 장애인차별예방심화, ⑦ 선생님을 위한 인권+ 등이다.

사이버를 통한 행정공무원대상 인권교육은 <표 4>와 같이 2007년 9회 4,895명, 2008년 7회 4,199명, 2009년 27회 5,592명, 2010년 41회 6,543명, 2011년 39회 8,511명, 2012년 48회 10,776 등 매년 교육인원이 증가하여 총 171회 40,51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이버인권교육 전체 교육인원 중 행정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7.6%이다.

<표 4> 행정공무원 대상 사이버인권교육 현황(2007~2012)

연 도	계		행정공무원		교 사		시 민		기 타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07	37	9,435	9	4,895	2	1,430	9	783	17	2,327
2008	31	12,394	7	4,199	13	7,011	7	884	4	300
2009	60	13,573	27	5,592	18	7,338	12	534	3	109
2010	65	10,538	41	6,543	24	3,995	-	-	-	-
2011	71	14,681	39	8,511	30	6,139	-	-	2	31
2012	109	21,550	48	10,776	30	8,747	31	2,027	-	-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부터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정책리더과

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기존의 강의식 인권교육의 일방성, 경직성,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생 중심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 3) 검찰 교정 등 법무공무원의 인권교육 현황

법무 행정공무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통해 인권침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초기에는 위원회가 검찰공무원, 교정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과정 및 강사단을 2006년까지 운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법무연수원에 인권과목이 정규과목화 되었다. 그 이후 마중물 역할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08년부터 “인권감수성 향상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검찰·교정·출입국·소년 4개 분야에 걸쳐 모두 48명의 내부강사를 양성하였고 검찰·출입국·교정 등 각 직역별 인권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법무부는 2008년 78회 2,452명, 2009년 83회 2,765명, 2010년 70회 2,12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6> 법무부 인권교육 실시 현황('08~'10년)

년도 내용	2008년		2009년		2010년	
	교육 횟수	교육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인원
인권감수성훈련	15회	475명	15회	428명	18회	455명
인권과목 (법무연수원)	50회	1,646명	24회	1,141명	18회	563명
역할극 (신입검사대상)	3회	135명	3회	139명	-	-
강사양성과정	10회	196명	11회	154명	6회	72명
외부강사 인권특강	-	-	30회	903명	28회	1,030명
합 계	78회	2,452명	83회	2,765명	70회	2,120명

이외에도 법무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검찰·교정·출입국·소년보호 분야에 대한 인권다큐멘터리 동영상 제작하여 산하 기관에 배포하였다. 교육 효과적 측면에서 체험 역할극 중심의 인권감수성 훈련이 강의 형식의 외부강사 방문교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교육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4) 경찰공무원 인권교육실시 현황<sup>10)</sup>

공무원 중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이 경찰관련 인권교육이다. 경찰관련 인권교육은 2002년부터 추진하였는데, 2004년 연간 10시간이상 인권교육이수가 의무화 되면서 경찰관 양성기관 및 재교육기관인 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교육원, 수사보안연수소를 비롯한 각 경찰청의 직장교육에서도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었다.

2009년도 경찰청은 인권교육을 크게 전문가 양성, 기본·직무교육, 관서별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인권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인권강사과정’, ‘피해자 서포터스과정’을 운영하였다. 계급별 기본 교육 및 주요 직무교육에는 ‘경찰과 인권’, 피해자보호 등 인권관련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지방청에는 지방학교를 설치하여 인권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9년도 경찰청 인권교육 현황은 524개 과정에 인권과목을 개설하여 연인원 43만 8,904명을 교육하였다.

### 3. 공무원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현황

#### 1) 기본교재 등 교육콘텐츠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이후 공무원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열악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인권 교육자료는 크게 기본교재, 강의교안(ppt안), 사이버인권교육콘텐츠,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경찰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인권길라잡이 경찰편, 2002년」<sup>11)</sup>, 「경찰인권교육 방법, 2003년」, 「수사분야 인권교육 교재, 2008년」 「경비분야 인권교육 교재, 2008년」, 등을 개발, 보급을 통하여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물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경찰청은 위원회가 개발한 「인권길라잡이 경찰편,

10) 경찰관련 인권교육 현황은 2009년도 이후 부재하여 수록하지 못하였다.

11) 「인권길라잡이 경찰편, 2002년」은 경찰인권교육 기본교재로서 ①인권이란무엇인가, ② 경찰활동과 인권쟁점, ③ 수사와 인권, ④ 구급과 인권, ⑤ 경비·정보활동과 인권, ⑥ 경찰장비 사용과 인권, ⑦ 즉결심판과 인권 등 총 7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부록으로 생각해 볼 거리, 이야기 거리, 읽을거리, 경찰과 인권자가진단 퀴즈와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구제의 절차 등이 포함되었다.

2002년」, 「경찰인권교육 방법, 2003년」을 교재로 활용하였다. 2010년에는 경찰인권 길라잡이, 수사와 인권, 경비와 인권 3권의 책을 통합하고 새로운 위원회 결정례, 변경된 법규 등을 반영하여 「경찰과 인권」 교재를 개발하였다.

경찰활동관련 된 각 장은 ‘인권쟁점 사례 -> 사례의 문제점 -> 관련된 법규와 판례 -> 해설 -> 인권존중을 위한 직무가이드’ 제시하는 순으로 구성되었다. 이 교재는 인권 강사가 인권교육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만들어 제공되었고, 내년에 사이버콘텐츠로도 만들어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인권교육 기본교재와 함께 인권강사들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인권교육을 지원하고자 학습자 참여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이 적용된 경찰인권교육방법을 2003년 개발하였다. 「경찰인권교육방법」에는 인권보호프로그램, 인권감수성 키우기 프로그램, 갈등해결능력향상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검찰, 교정 등 법무공무원을 위해서도 「인권길라잡이-검찰편」, 「인권길라잡이-교정편」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국군인권교육 교재, 2007년」, 「군 의료분야 인권교육 교재, 2008년」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수사와 인권’을 개발하여 군대내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군인권교육 교재」는 강사용 기본교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군 최초로 국군 인권교육 기본교재를 제작하였다. 이 교재는 국군장병의 인권 신장과 감수성 향상을 위해 발간되었다. 중점 내용으로 인권바로알기, 인권과 군대, 지휘권과 인권, 군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 전쟁·분쟁과 인권, 군인의 인권, 부록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군인의 인권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영역을 존중받을 권리, 건강권과 휴식의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 징계 및 형사절차와 인권, 인권침해구제제도 등 군인의 인권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 교재의 내용은 ‘군대와 인권’ 사이버인권교육콘텐츠로 개발되어 2013년부터 군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수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표준강의안(ppt)으로 만들어져 강사들에게 보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과 인권’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

자료는 ‘행정과 인권’ 사이버 콘텐츠로 전환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과 인권 표준강의안(ppt)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또한 이주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길라잡이」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 교재에는 이주관련 표준강의안과 함께 이주관련 인권영상 CD도 제작되어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에 차별에 대한 인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차별예방과정」 사이버 인권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2013년 하반기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교육 추진을 위해 개발된 인권교육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7>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관련 인권교육 교재 개발 현황

대 상	개발된 인권교육자료
경찰 공무원	- 경찰 인권길라잡이(표준교안 포함) - 경찰 인권교육방법 - 수사와 인권 - 경비와 인권
법무 공무원	- 검찰 인권길라잡이(표준교안 포함) - 교도관 인권길라잡이(표준교안 포함) - 교도관의 인권길 찾기(비디오) - 출입국분야 인권교육 교재
군대 종사자	- 국군 인권교육 교재(표준교안 포함) - 의료와 인권
국가·지자체 정공무원	- 행정과 인권(on-off 콘텐츠, 표준교안 포함) - 정보와 인권 표준교안 - 인권의 해설 - 인권이해 표준교안 - 만화로 읽는 세계인권선언
사회복지 종사자	-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교육 프로그램 - 노인분야 인권교육 교재(표준교안포함) - 정신장애분야 인권교육 교재(보조교재 및 표준교안 포함) - 이주민분야 인권교육 교재(표준교안포함) - 노숙인분야 인권교육교재
입법·사법 공무원	- 입법분야 인권교육 교재 개발 연구 - 사법분야 인권교육 교재 개발 연구
기업·언론인	- 인권경영 입문 - 장애인권 언론인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이해, 행정과인권, 정보와 인권, 노인과 인권, 이주민과 인권 등 2-3시간용 표준강의안(PPT)<sup>12)</sup>과 함께 인권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인권영화, 인권UCC, 사진, 포스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www.edu.nhrc.go.kr](http://www.edu.nhrc.go.kr))」에 탑재되어 제공되고 있다.

### 3-2. 교육프로그램 구성 현황

12) 개발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과 인권, 검찰과 인권, 교정과 인권, 세계인권선언, 인권의 이해, 정보와 인권, 경찰수사와 인권, 노인과 인권, 행정과 인권, 정신장애와 인권, 다문화와 인권, 청소년과 인권, 기업과 인권, 군대와 인권, 노인과 인권 등이다.

행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의 목표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인권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인권적 관점에서 해결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옹호적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 인권관련 지식을 발전시키기, △ 인권보호를 위한 기술익히기 △ 인권감수성 및 인권옹호 태도를 강화하기 증진시켜야 한다. 따라서 연수프로그램은 이런 목표요소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시간과 내용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행정공무원의 의무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권중심적 가치체계와 태도에 의해 완수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태도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문화에 내재된 인권적 문제점 발견하고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태도도 길러야 한다.

교육대상별 인권연수과정 프로그램은 교육효과적 측면에서 주입식 외부강의보다 학습자 중심의 게임, 역할극, 토론 등 학습자 중심의 참여식 방법이 현저히 강의효과가 높기 때문에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인권주제에 대한 내용전문가와 참여형 교육 진행 전문가 함께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2005년도 운영된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프로그램<sup>13)</sup>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일차: 사립과 주제입문> 마음열기 -> 인권지식 및 감수성 증진 활동 -> 인권영화 감상

<2일차 : 인권감수성 증진> 내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 내가 경험한 인권현장 (자신의 인권현실인식하기) -> 군인 인권 쟁점관련 시뮬레이션 토론 -> 인권시각에서 본 한국 군대(강의) -> 간담회(군 사상자 가족과 함께)

<3일차: 문제인식 및 해결> 군인 인권목록 이해하기(강의) -> 군 관련 인권쟁점 사례 토론 -> 군 인권문제 및 해결방안 찾기 워크숍 -> 나의 실천약속 -> 비폭력대화 익히기

<4일차: 메아리 및 정리> 인권교육 교수설계이해 ->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 발표 -> 연수과정 평가 등

13)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감수성향상과정 자료집」, 2005. 12.

이러한 연수과정 프로그램 구성 틀은 2007년까지는 교정, 검찰, 행정공무원 등 다른 연수과정에도 매우 정확하게 적용되었다. 그렇지만 2008년부터 연수과정이 1박2일로 줄어들고 교육회수를 확대하면서 강의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시간 중 50%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09년도에 실시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1일차> 마음열기 -> 인권이해 ->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장애인, 여성, 아동, 이주민, 노인 등)<sup>14)</sup> 이해, <2일차> 행정관련 인권 쟁점사례 -> 내가 경험한 인권문제 및 개선방안 워크숍 -> 발표 -> 평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 III. 한국 공무원 인권교육의 성과와 과제

#### 1. 공무원 인권교육의 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기초연구”에서는 공무원인권교육의 성과를 △ 공무원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공무원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 △ 공무원 인권교육의 제도화 달성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sup>15)</sup>

그동안 공무원 인권교육의 성과를 보면 첫째,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초기만 해도 국가지자체 등에서는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았고, 인권교육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상황에서 공무원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는 것은 고무적 현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군대 및 경찰공무원 분야에서 인권교육 필요성이 더욱 제고되었고 이는 인권교육 제도화로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이다.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보다 군대, 경찰, 법무공무원, 행정공무원 등 각 분야에서 매년 인권교육이 확대되고 있

14) 강의시간이 여유로우면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포괄적 접근보다는 장애인과 인권, 아동인권, 이주민인권, 여성과 인권 등 세부적으로 과목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1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기초연구”, 2011. 나달숙 교수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에서 공무원 인권교육의 성과를 인권교육 필요성 및 관심 증대,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 인권교육의 제도화 경향으로 보고 있다.

는 추세에 있다. 인권관련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 개설 수 등 교육인원, 교육회수가 증대하였다.

셋째, 인권조례제정, 인권교육훈련 규정 제정 등 인권교육의 제도화 경향이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군대, 경찰, 검찰 등과 관련하여 군 인권교육 훈련 등 7개 행정규칙을 통해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였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노숙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약자관련 개별 법령에서 인권교육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32개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단체장이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이외에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이나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계획에 인권연수과정이나 인권과목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 2. 공무원 인권교육의 향후 과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무원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은 과제<sup>16)</sup>를 안고 있다. 첫째, 인권교육의 양적확대와 함께 인권교육의 원칙을 준수하는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1회성 인권특강이 많고 그것도 대규모로 이루어져 인권교육의 효과를 달성하는 데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인권교육이 의무화 되면서 인권교육 실적 쌓기에 매몰되어 인권교육이 형식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 인권교육 가이드’ 등을 마련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계적 교육과정 설계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 전문강사 양성·관리 등 공무원 인권교육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일회적 강의 위주에서 탈피하여 인권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입용에서 퇴직까지의 인권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에 입각하여 각 단계별 교육프로그램과 참여형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교육참가자와 소통하는 교육생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줄 알고 교육현장에서 ‘인권을 통한 인권교육’이 진행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이 높은 인권교육 전문강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대상별, 인권주제별 등에 따라 적용할 다양한 인권교육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16) 공무원 인권교육의 한계를 △공무원 인권교육의 형식화, △인권교육방법상의 한계, △인권교육에 대한 실정법 근거 및 인권교육 평가체계 부재 등 인권교육의 제도적 한계, △공무원제도나 속성에 기인한 한계 등을 들고 있다. 양천수,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제13차 인권교육포럼: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과 실천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1.



셋째, 공무원 인권교육이 제도화 되고 있지만 인권교육이 형식화되지 않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위해 인권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이다. 입법을 통하여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제도화 되지 않으면 공무원 인권교육은 해당 기관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그 시행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책무를 명확히 하며,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자발적 인권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sup>17)</sup>

넷째,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수준의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군대인권교육협의회, 노숙인인권교육협의회, 노인인권교육협의회 등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공무원이나 모든 분야 인권교육을 아우르는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와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인권교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관련 상호교류와 정책조정을 위해 입법부, 사법부 및 중앙 행정부처, 인권단체, 인권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제정된 인권조례에서 19개 지자체(광역시 2, 기초 17개)가 “인권교육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 등도 구성하여 전사회적 인권교육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권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인권교육 모니터링<sup>18)</sup>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질적 담보가 어렵다. 인권교육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권교육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17) 유엔이 2011. 12. 채택한 인권교육훈련선언은 국가에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인권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

18)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의 인권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시간, 교육인원 등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이다.

여섯째,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하고 다양한 인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권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 한국 인권교육은 초기 단계 수준이다. 초기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 개발 등 인권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향후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인권교육기관의 설립은 필요하다. 이 기관을 통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자료를 포함한 각종 교재,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방법 등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준의 인권교육정책행동계획(인권교육 NAP)을 별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인권교육이 포함됨으로써 인권교육의 내용 및 비중이 많지 않고, 여러 인권정책과제 중 하나로서 인권교육 내용이 상대적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유엔은 ‘인권교육 10년 계획(1994)수립’,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시행 등에서 별도 인권교육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기본계획’을 별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sup>19)</sup>

#### IV. 나오는 말

무엇보다도 공무원 인권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을 ‘가해자-피해자’라는 이분법적 도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을 ‘인권정책리더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대상 강의식 인권교육은 인권 피해자적 관점에서 그들을 잠재적 가해자와 인권보호·향상의 대상으로 전제하면서 교화식 교육으로 흘러 인권을 통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존중감을 침해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 향유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

19) 필리핀은 필리핀의 인권교육을 국제사회에 수출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별도로 인권교육기본계획을 추진하였음. 이외에도 2000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튀니지, 말리, 세네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덴마크, 터키,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필리핀 등 18개국이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인권문제를 인식하도록 하여 타자, 즉 시민에 인권존중의 책임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중심적 사고를 하는 공무원은 나의 권리와 존엄성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하거나 차별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인권이 골고루 존중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취약집단의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며우리 사회의 인권을 이끌어가는 ‘인권 leader’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인권교육은 하나의 교과목(특강)으로만 도입한다고 해서 성취될 수는 없다. 인권을 알고 옹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은 오직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와 방법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억압적인 직장분위기와 강사 중심적 교육방식으로는 결코 올바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성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sup>20)</sup>

첫째, 교사-학생이라는 기존의 위계적 교수모형을 벗어나 강사와 학습자가 동등한 상호작용적 접근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가는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현장지향성을 가지고 공무원이 직면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스스로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촉진자로서의 자기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이나 정답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참여하에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참여적 교육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 참가 공무원의 특수성에 초점<sup>21)</sup>을 둔 실천적 접근원리 적용이 필요하다. 실천적 접근은 아는 것을 실제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자의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 실제 생활환경에서 공무원은 ‘무엇이 인권보호를 위한 규칙인가?’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칙내에서 자신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

20)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인권교육방법」, 2003, pp. 13~15.

21) UN 인권최고대표부에서는 직급과 기능에 따라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즉 상급자들에게는 인권친화적인 법집행의 전략과 정책개발에 초점을 두고, 하급자 교육에서는 실무에 초점을 둘 것을 권고한다. 더불어 특수한 임무, 즉 범죄수사나 공공질서 유지, 혹은 대민업무 등과 관련된 기능에 따라 교육의 초점을 달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고 싶어 한다. 이 두가지 요구 중 하나라도 무시하게 되면 교육은 신뢰받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않게 된다.

셋째, 행동과 태도의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인권감수성 자극 접근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직업의 특성상 항상 인권 침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기준의 제시와 구체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감성을 자극하는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권기준이나 법규가 분명하지 않은 실무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공무원의 인권적 태도나 감수성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의 융통성 원리의 적용이다.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융통성은 교육 참가자의 특성 및 요구, 물리적 공간, 시간 등에 기초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융통성 있게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인권기준 제시의 포괄성과 교육기법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에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다양한 교수기법을 선택하여 학습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순원(2000), 「평화, 인권, 교육」, 한울.
- 강순원(2002),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길잡이』, 국가인권위원회.
- 고상준외(2003), 「경찰인권교육방법」, 국가인권위원회.
- 구정화외(2004),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 나달숙(2011),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현황과 과제 지향과제” 「교육법학연구」 23(1).
- 문용린외(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양천수외(2011),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이종태외(2005), “인권교육개념 및 방향정립 모색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5),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 정원오(2006),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김철홍(2006), “모더레이터와 강의기법”. 국가인권위원회.
- \_\_\_\_\_ (2011),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발표자료.
- \_\_\_\_\_ (2012), “군 인권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 법과 인권교육학회.
- 국가인권위원회(2005), 유엔제1차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번역자료.
- \_\_\_\_\_ (2010), 제2차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2010-2014)번역자료.
- \_\_\_\_\_ (2011),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문 번역자료.